



총 설

총 설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한국의 현대교육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양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 초등교육의 의무화, 1970~1980년대 중등교육의 확산, 1990년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하였고, 질적 측면에서는 현재 세계 최고의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 같은 기간학제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세계 각지에 교육봉사·교육원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방 당시의 상황, 즉 초등교육 취학률이 47%에 그치고, 문맹률도 상당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할 만하다.

한국 현대교육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룬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정책은 어느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설집은 바로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제반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각 분야의 정책적 과제와 정책 내용 그리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해설집에서는 교육정책을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첫째, 제1영역에서는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이 영역에 속한 자료들은 세부적인 면에서 볼 때,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과 같은 기간학제는 물론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이나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개혁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세부 교육부문과의 관련성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영역에 포함시킨 자료들은 교육이념과 교육제도의 기본 골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은 국왕의 백성(百姓), 천왕의 신민(臣民)으로 살았던 한국인을 대한민국 국민(國民)이자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 새롭게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

교육과 단선형 학제로 요약되는 교육제도의 기본골격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계급·민족·성(性)별 차별을 당연시하는 교육제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인이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청사진(靑寫眞)이고, 이후의 교육정책은 그러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면서 현대적 교육체제를 현실화해 가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2영역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써 초·중등 교육정책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우선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법」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국민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무상교육의 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무교육 정책은 어떠한 교육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 분야의 교육정책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중등교육 진학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중등교육 체제 개편이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1950년대 후반의 ‘의무교육 6개년 계획(1954~1959)’과 1960년대 초의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은 초·중등 교육정책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제3영역에서는 초·중등교육과 함께 기간학제를 이루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자료를 다루었다. 고등교육 정책은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제정으로 방임상태에 있던 사립대학을 교육정책의 대상으로 삼았고, 「학교정비령」에 의해 고등교육기관 및 교직원에 대한 규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아직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은 주로 대학입시제도나 대학정원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개별 현안에 대처하는 대응식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80년대부터 추진된 교육개혁과 대학교육협의회의 법제화가 분수령(分水嶺)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등교육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고등교육 정책이 연이어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넷째, 제4영역에서는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에 관한 정책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들 분야는 현재까지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 같은 기간학제와 구분되는 부수적인 교육분야로 간주되지만, 최근의 교육정책 동향은 이들 교육분야의 중요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평생교육은 그동안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이해되었지만,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설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어느 특정 교육분야가 아니라 현대교육의 근간(根幹)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교육체제가 특정 기간의 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친 교육체제를 지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에서도 1997년 이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公教育化)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공교육체제의 주요 부문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변화는 한국의 현대교육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만큼 교육정책적 관점 또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실행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설집은 이러한 기본 구조 하에, 제1영역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에 20개 항목, 제2영역 초·중등교육에 25개 항목, 제3영역 고등교육에 16개 항목 그리고 제4영역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에 20개 항목 등 총 81개 항목의 교육정책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각 영역의 모두에는 각 영역별 교육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제시하고, 각 항목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와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다. 이 해설집이 현대 교육정책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각 교육부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책자료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해설집을 통해 교육연구자나 교육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이 현대 교육정책의 주요 흐름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해설집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자료와 향후 수집될 교육정책자료에 관한 안내서가 지속적으로 소개되었으면 한다.

